

“소비쿠폰은 모두를 위한 정책, 고려인 외면 안돼”

광주 광산구의원 전원 성명 발표

정부에 지급기준 신속 마련 촉구
본보 연속 보도에 전국적 관심
“그들도 우리 지역사회 한 부분”

“전남일보의 보도가 없었더라면 광산구 의원들 모두가 고려인 동포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나섰어야 하는 일이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고 바로 잡고자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정부에 신속한 소비쿠폰 지급기준 마련과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광산구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려인과 함께하는 모두의 회복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산구의회 소속 의원 18명 중 모두가 찬성의 뜻을 모았다. 각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고려인 동포들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힘을 모은 것이다.



16일 광주 광산구의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최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일차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돼 수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그 결과 광주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깊은 상처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은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같은 국민”이라며 “소비쿠폰 정책이 민생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고려인 동포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성명서는 본보가 10일자 1면<“우리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과 12일자 6면<“고려인도 한민족...소비쿠폰 없어도 되지만 서글퍼”>, 15일자 1면<“우리 이웃사

촌”...고려인 외면 정책에 지역사회 뭉쳤다> 등의 기사를 연속보도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김영선 광산구의회 의원은 “먼저 보도에 감사한다. 전남일보가 아니었다면 고려인 동포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알지 못할 뻔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나섰어야 하는 일이나 그

리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고 바로 잡고자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소중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고려인 동포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인 동포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그들을 절대 외국인이라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문제 뿐만이 아닌 평소에도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와 더불어 지내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뒤늦게라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우리를 한 민족으로 생각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물론 쉽지 않겠지만 주민들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거주자는 4800여명(동포 비자 3700명)으로, 상당수가 외국 국적으로 소비쿠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적으로 거주 중인 고려인은 약 12만명으로 추산된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전남대, 지역 고교생 전공 체험 프로그램 성료

1200여 명 진로 탐색 참여 전공 강의·실습 호응 높아

전남대학교가 지역 고등학생 1200여 명을 초청해 전공과 진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남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반기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입학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주캠퍼스 40개, 여수캠퍼스 8개 등 총 48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광주·전남지역 25개 고교에서 약 127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반기는 전공 체험’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과 강의와 실습·실습,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학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김경수 입학처장이 전

남대 소개와 함께 ‘지.대.사(지역 대학을 사랑하자)’ 특강을 직접 진행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교사 간담회와 디지털도서관 ‘정보마루’ 견학도 새롭게 마련돼 현장 반응이 뜨거웠다. 전남대 동문이자 참가 교사인 나주영산고 A교사는 “전남대의 변화와 발전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자컴퓨터공학부 참가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 반도체와 화학 등 다양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간호학과 참가자는 “실습을 통해 진학 의지가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체험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977명 중 883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 중 약 59%에 해당하는 619명은 ‘매우 만족’이라 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했다. 노병하기자

광주시교육청 현수막, “법 위반” vs “성과 공유 차원”

시민단체 “옥외광고물법 위반” 교육청 “광주교육 위상 홍보” “예산 낭비·정치적 오해 우려” 교육청 “법령 준수·비용 정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외벽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법령 위반 여부와 예산 집행 적정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현수막이 분청 외벽에 설치됐고,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며 “이 중 다수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으로 ‘30일 이내 현수막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청 청사에는 별관 포함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이 중 1개는 30일을 초과한 상태라는 것이다.

단체 측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교육감 실적을 부각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수막당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나 내부 지침이나 통일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교육예산이 긴축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전시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수막은 교육청의 성과와 정책,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순히 교육감 치적 홍보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교육부 우수사례 수상, 청렴 실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확산 등도 주요 내용이며,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라고 설명했다.

현수막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크레인 장비, 안전 인력, 시안 수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며 “향후 게시 위치별 규격과 단가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비용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관련 서구청 요청에 따라 위반 현수막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으로 법령 검토를 강화하고 분청 및 산하기관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병하기자

전남교육청, ISO 37001 인증 획득

국제표준 청렴 경영 인정받아 반부패 체계 강화 추진 방침

전라남도교육청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 수준의 청렴 경영체계를 공식 인정받았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도교육청은 윤리경영 기반과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위험요인 분석, 리스크

평가,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부패 지침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 외부 심사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기관인 한국품질재단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 체계, 직원 인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을 승인했고, 16일 인증서를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기존 반부패 조직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병하기자

참고서 베낀 고교 수학시험, 재시험 범위 축소에 학부모 반발

‘표절 12문항만 재시험’ 결정 논란 교육청 “재시험은 형평성 문제”

참고서 문제를 무단 활용해 기말고사를 출제한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재시험을 앞두고 시험 범위를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6일, 해당 고교가 1학년 수학 기말고사에서 외부 참고서와 동일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확인돼 17일 오전 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시험 대상은 전체 22문항 중 참고서 문제로 판명된 객관식 10문항과 단답형 2문항 등 총 12문항이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정상적으로 출제된 문항까지 포함해 시험을 다시 치를 경우, 기존에 성실히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문항만을 재시험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문항 중 절반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

기 어렵다는 반발도 거세다. 일부 학부모는 “한두 문항의 오류가 아니라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하고 다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면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사례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은 없으며, 사안별로 판단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재시험 사유와 상황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정 마련은 어렵다”며 “현재로서 가장 타당하고 형평에 맞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특차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